

잠재집단분석을 활용한 한국인의 복지태도 유형 연구*

박미경**·조민효***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복지태도 유형을 규명하고, 각 유형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태도이론을 토대로 복지태도를 인지적 태도, 정의적 태도, 행동적 태도로 구성하여 잠재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인의 복지태도 유형은 선별적 복합 중심형(16%), 선별적 국가 중심형(54%), 보편적 국가 중심형(30%) 등 3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인의 복지태도 유형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복지태도, 복지태도 유형, 잠재집단분석

I. 서론

최근 한국 사회에서 복지논쟁이 이슈화되고 있다. 특히 2010년 지방선거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2012년 총선, 그리고 대선에서 복지정책 및 복지국가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복지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 맞춤형 복지로 전환하여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복지 3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제·개정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예산은 2012년 82조 779억 원에서 2015년 101조 3,590억 원으로 3년간 약 23.5% 증가¹⁾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 및 사회보

* 본 논문은 2015년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3A2055042).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과정(qkralrud14@skku.edu)

*** 교신저자,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chomh@skku.edu)

1) 보건복지부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에서 공적연금 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대비 2015년 예산이 증가한 분야는 노인복지 분야가 126%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취약계층지원 분야 80.4%, 보육복지 분야 61.5%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2, 2015).

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복지사업 기반 구축 및 복지재정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책체감도²⁾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복지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의 행복을 제고하기 위한 복지정책의 체감도 향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복지정책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에 대한 태도 및 인식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Page & Shapiro, 1983; 백정미 외, 2008: 320; 이한나·이미라, 2010: 255). 시간과 공간뿐만 아니라 정치·역사적 맥락에 따라 변하는 것이 복지태도 및 인식이다. 실제 서구권 복지국가들의 복지제도 수립 과정을 살펴보면 사회·정치·경제적 요소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국민의 복지에 대한 태도와 인식의 합이 유기적으로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Esping-Andersen, 1990).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형성 및 집행시 국민들의 복지태도와 인식 고려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다(주은선·백정미, 2007).

국내 여러 연구자들은 상기의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복지인식 및 복지태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2012년 복지논쟁이 고조되기 이전의 연구(김상균·정원오, 1995; 최균·류진석, 2000; 양옥경, 2002; 이성균, 2002; 주은선·백정미, 2007; 백정미 외, 2008; 이중섭, 2009; 모지환·김행열, 2009; 김사현·홍경준, 2010) 등이 대부분이다. 2012년 이후 미국 및 유럽발 경제위기, 물가 및 실업률 상승, 가계부채의 확대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대두되면서 복지확대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다(김유경, 2012). 최근에는 복지정책이 선거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강정희·염동문, 2014: 320). 따라서 복지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태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바람직한 복지정책 수립 및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단위: 억원)

구분	12년(A)	15년(B)	B-A	%
사회복지 분야	290,973	434,491	143,518	49.3
○기초생활보장	79,028	94,557	15,529	19.6
○취약계층지원	11,880	21,437	9,557	80.4
○공적연금	124,415	172,777	48,362	38.9
○보육	30,999	50,072	19,073	61.5
○노인	39,040	88,224	49,184	126.0
○사회복지일반	5,611	7,424	1,813	32.3

자료: 보건복지부 2012년, 2015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개요

- 2) 정책체감도란 제도로 인한 정책효과를 의미하는 개념보다는 제도의 대상자들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심리적인 정서적인 개념을 의미한다(한동우, 2015). 따라서 정책체감도는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도와 실제로 느끼고 있는 정책 실행도 간의 차이로 정책만족도와는 구별된다(김유경 외, 2011: 43).

것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들의 복지태도를 유형화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복지태도를 인지적 태도, 정의적 태도, 그리고 행동적 태도로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잠재집단을 구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복지정책의 체감도 향상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복지태도

복지태도에 관한 논의에 앞서 태도에 대해 이론적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태도(attitude)란 경험을 통해 조직화되는 것으로서, 태도대상과 상황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직접적이거나 역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및 신경적 준비상태를 의미한다(Allport, 1935; 한덕웅 외, 2004: 127에서 재인용). Robbins & Judge(2011)은 태도란 사람, 사물, 사건에 대한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인 평가적 표현이라고 정의하였다. 조성대 외(2003)는 태도를 개인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 중의 하나로 지각산출의 한 형태으로써 개인행동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정의하였다.

태도는 인지적 요소, 정의적 요소, 그리고 행동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Katz & Stotland, 1959; Rosenberg & Hovland, 1960; Breckler, 1984; Berkman & Neider, 1987). 인지적 요소(cognitive component)는 태도대상에 관한 신념, 생각, 지식 등을 의미한다. 정의적 요소(affective component)는 태도대상에 대한 감정을 의미하며, 대상에 대한 좋음(好)과 나쁨(不好)에 대한 평가적 측면으로 포함하는 정서반응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동적 요소(behavioral component)는 태도의 행동적 특징으로 대상에 대한 어떤 행위를 하려는 의도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복지태도란 무엇인가? 복지태도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³⁾. Taylor-Gooby(1985)는 복지태도(welfare attitudes)를 전반적인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지지여부, 복지비용의 문제, 재분배, 그리고 복지국가의 정당성 등에 대한 사회적 흐름 또는 사회적 태도로 정의하였다(최균·류진석, 2000: 227에서 재인용). 복지태도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용어로 복지인식 또는 복지의식 등을 들 수 있다. 이광훈·김권식(2012: 99)에 따르면 복지의식(welfare consciousness)은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정도 및 복지정책의 소요 재원에 대한 복지행위자의 의식 및 태도를 의미한다. 복지의식을 보다 확장된 의미로 정의한 김상균·정원오

3) 복지태도와 복지인식 또는 복지의식 등 학자에 따라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 사용되는 용어를 그대로 인용하고자 한다.

(1995: 3)는 복지의식을 복지와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적 제도, 복지체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태도 혹은 의식으로 정의하였으며, 양옥경(2002: 231) 또한 사회의 정치, 경제적 기반 위에서 사회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제도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 또는 태도로 규정하였다. 이중섭(2009: 75-76)은 복지의식과 복지태도를 구분하였다. 복지의식은 복지에 대한 감정과 인상 그리고 가치와 신념 그 자체이며, 복지태도는 복지의식에 기반을 둔 행동성향을 의미한다. 이중섭(2009)의 정의는 복지의식을 태도의 구성요소 중 인지적 요소로 복지태도를 행동적 요소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복지의식 및 복지태도에 대한 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복지태도의 구성요소로서 인지적 요소, 정의적 요소, 그리고 행동적 요소로 구분하고자 한다. 복지태도 중 인지적 요소는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지각이나 신념으로 최근 복지논쟁의 중점이슈인 복지대상선정에 대한 인식으로, 복지서비스를 수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 및 범위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태도로 볼 수 있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태도는 복지 이데올로기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요소를 의미하는 주요 변수로 조작화 하였다.

둘째, 정의적 요소는 앞서 설명했듯이 대상에 대한 개인의 감정을 의미하는데, 복지서비스 제공의 맥락에서는 특정 책임주체 혹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선호도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복지책임주체의 선호도는 복지공급주체에 대한 선호여부를 의미하며, 이는 복지국가 유형을 구분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이한나·이미라, 2010: 260). 본 연구에서는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선호도를 국가, 시장, 시민사회, 그리고 가족 등으로 설정하고 정의적 요소를 가리키는 지표로 구성하였다.

셋째, 행동적 요소는 복지에 대한 행동의도로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찬성하여 복지의 적극적 구현에 실천적으로 참여할 의도로 정의하였다. 다양한 종류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정보호는 필수적이다. 그러한 만큼, 국민의 입장에서 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비용을 부담하고자 하는 행위를 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적 요소로 파악하고자 한다.

2. 복지태도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복지태도에 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복지태도를 인지적 요소, 정의적 요소, 행동적 요소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복지태도에 관한 단일차원 관점 연구와 다차원 관점의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보하고자 한다.

첫째, 복지태도를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소 등 단일차원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 중 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정도를 측정하는 연구는 Blekesaune & Quadagno(2003), Svalfors

(2004), 백정미 외(2008), 김신영(2010), 이훈희 외(2011) 등을 들 수 있다. 이훈희 외(2011)는 한국의 복지태도와 건강보험 인식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복지태도를 복지혜택과 근로의욕(사회복지를 늘리면 일할 의욕이 떨어지는가), 성장과 분배(성장과 분배 중 무엇이 중요한가), 소득분배의 인식(부자는 세금을 더 내고 빈자는 덜 내야하는가?, 우리나라의 소득과 재산의 분배는 평등한가?, 소득격차 해소가 정부의 책임인가?) 등으로 구성하였다. 김신영(2010)은 한국인의 복지의식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소득격차 완화뿐만 아니라 개인의 복지의식을 일자리, 의료, 노인, 실업, 주거 등 정부의 책임 태도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국가간 비교연구를 진행한 Svalfors(2004)는 복지태도를 소득격차 해소, 일자리 제공, 아픈사람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 및 실업자에게 온당한 생활수준 제공, 저소득 가구의 대학생에게 재정지원, 저소득층에게 온당한 주택 제공 등에 대한 국가의 책임정도를 스웨덴, 브리튼, 독일, 미국 등 국가 간 차이를 규명하였으며, 백정미 외(2008) 또한 복지의식을 국가복지 책임정도 구성하여, 복지인식에 대해 미국, 스웨덴, 프랑스, 한국 등 국가 간 차이를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경우 미국보다 복지인식 수준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Blekesaune & Quadagno(2003)는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s)자료를 활용하여 복지태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복지태도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복지태도를 일자리, 의료, 노인, 실업, 소득격차 완화 등에 대한 국가책임으로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평등주의 인식과 실업률이 높을수록 실업자에 대한 국가책임 지지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태도를 정의적 요소 관점에서 살펴본 양옥경(2002)은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한국인의 복지의식을 규명하기 위하여 복지의식을 복지제도인식, 복지책임주체인식, 복지정책육구인식 등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복지책임주체인식의 경우 복지대상자에 대해 복지제공의 1차적 책임주체를 누구로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자신, 가족과 친척, 이웃과 지역사회, 기업, 정부 등 5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가난한 사람에 대한 복지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견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업자는 자신과 정부, 노인부양과 청소년 및 아동보호는 가족과 친척, 장애인, 여성가장,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복지제공의 책임주체는 정부에게 있다는 견해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복지서비스 유형에 따라 복지책임 주체의 상이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성균(2002) 또한 한국사회 복지의식의 특성 및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복지의식을 복지책임의 주체로 설정하고 자기자신, 가족과 친지, 이웃주민,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복지태도를 인지적 태도 관점에서 살펴본 김희자(2013)는 계급 및 계층이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복지태도를 복지정책별 정부지출 확대와 보편주의에 대한 태도로 규명하여 분석하였다.

김사현(2015)은 한국인의 복지태도 불일치에 대한 연구에서 복지태도를 복지비 지출과 세

금부담에 대한 태도(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증세 찬성여부)로 구성하여 복지태도 불일치를 분석하였으며, Hansenfeld & Rafferty(1989) 또한 복지태도를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지출과 세금추가 부담의사로 구성하여, 복지태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주은선·백정미(2007)는 행동적 요소를 중점적으로 복지인식을 평등인식, 공공복지 확대 지지도, 재원부담의사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재원부담의사를 빈자들의 복지에 집중적으로 쓰이는 경우와 보편적 복지에 쓰이는 경우를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상위계층일수록 평등인식은 낮게 나타났으며, 하위계층일수록 그리고 공공복지 수급 경험이 있을수록 공공복지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복지재정부담의 경우 상위계층일수록 복지재정부담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계층과 정치이념은 복지인식에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 하위계층일수록 친복지적인 성향을 규명하였다. 이중섭(2009)은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복지의식을 복지에 대한 인식이나 사고뿐만 아니라 행동지향 혹은 행위성향의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에 초점을 두어 복지정책의 지출정도에 대한 인식을 복지의식으로 규명하였다.

둘째, 복지태도를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는 최균·류진석(2000), 김사현·홍경준(2010), 이한나·이미라(2010), 권승(2012) 등을 들 수 있다. 복지서비스 중 보육서비스에 대한 복지태도 형성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권승(2012)은 복지태도를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 정도와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한 세금 추가부담 의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김사현·홍경준(2010)은 서울시 복지패널 제1차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민의 복지태도를 잠재집단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서울시민의 복지태도를 유형화하기 위하여 한시적 급여(급여는 긴급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최소생활보장(정부는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중산층포괄(중산층에게도 복지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빈부격차감소(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재정확대(세금을 더 늘려서라도 복지예산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등 5개 문항을 활용하여 집단을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민의 복지태도는 복지확대 지지층, 부동층, 최저생활보장 지지층 등 3개의 집단으로 규명하였다.

최균·류진석(2000)은 국민복지의식조사를 활용하여 복지의식을 가치차원, 태도차원,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과 복지실천의지 등으로 구분하여 특징을 규명하였다. 가치차원은 평등 현실에 대한 인식과 빈곤 원인에 대한 인식을 개인적, 사회적 원인으로 구분하였으며, 태도차원은 사회복지 실시의 목적, 사회복지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은 자신, 가족과 친척, 이웃, 지역사회, 국가로 구분하였으며, 복지실천의지는 자발적 세금납부여부와 복지예산 확충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특히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국가책임지향적이며, 복지예산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70%이상 찬성하지만 세금부담의사는 반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한국인 복지의식의 이중성을 규명하였다.

이한나·이미라(2010)는 한국인의 복지태도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복지태도를 성장과 분배에 대한 지향, 소득격차 해소의 국가책임에 대한 태도,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지향 등 4가지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지향을 제외한 나머지 복지태도에 소득분배 형평성 지각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금부담 형평성지각의 경우 소득격차 해소의 국가책임에 대한 태도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선행연구 검토

연구자	복지태도(복지의식)
최균·류진석(2000)	가치차원(평등 현실에 대한 인식과 빈곤 원인에 대한 인식), 태도차원(사회복지 실시의 목적, 사회복지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인식),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 복지실천의지(자발적 세금납부여부와 복지예산 확충에 대한 인식)
양옥경(2002)	복지제도인식, 복지책임주체인식, 복지정책욕구인식
이성균(2002)	복지책임의 주체
Blekesaune & Quadagno(2003), Svallfors(2004), 백정미 외(2008) 김신영(2010)	국가복지책임
주은선·백정미(2007)	평등인식점수, 공공복지확대지지도, 자원부담의사(빈자중심복지, 보편적 복지)
이중섭(2009)	복지정책의 지출정도
김사현·홍경준(2010)	한시적 급여, 최소생활보장, 중산층포괄, 빈부격차감소, 재정확대(증세)
이한나·이미라(2010)	성장과 분배에 대한 지향, 소득격차 해소의 국가책임에 대한 태도,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지향
이훈희 외(2011)	복지혜택과 근로의욕(사회복지를 늘리면 일할 의욕이 떨어지는가), 성장과 분배(성장과 분배 중 무엇이 중요한가), 소득분배의 인식(부자는 세금을 더 내고 빈자는 덜 내야 하는가, 우리나라의 소득과 재산의 분배는 평등한가, 소득격차 해소가 정부의 책임인가)
권승(2012)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정도,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한 세금 추가부담 의향
김희자(2013)	복지정책별 정부지출 확대(기존복지의 강화, 복지영역의 확장), 보편주의에 대한 태도
Hansenfeld & Rafferty(1989) 김사현(2015)	복지비 지출, 세금부담에 대한 태도

3. 본 연구의 차별성

복지태도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결과 연구 내용,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연구 내용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복지인식 및 태도를 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정도(Blekesaune & Quadagno, 2003; 백정미 외, 2008; 김신영, 2010), 복지책임 주체(양옥경, 2002; 이성균, 2002), 인지적 요소 관점인 보편주의에 대한 태도(김희자, 2013), 행동적 태도 관점인 자원부담 의사(Hansenfeld & Rafferty, 1989; 주

은선·백정미, 2007; 이중섭, 2009; 김사현, 2015)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지태도가 단일차원이 아닌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소를 모두 내포하고 있는 다차원적 복합개념이라는 점을 모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복지서비스 분야별 국민들의 복지인식 및 태도는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복지태도를 복지서비스 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접 1차 자료 수집을 통하여 전 국민에 대한 대표성 있는 표본을 구성하고 복지태도를 보육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다양한 분야의 복지 중 상대적으로 최근 제도가 변화하였으며, 인지도가 높은 보육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로 한정하였다. 보육복지의 경우 만0세~5세 보육료 및 양육수당 전 계층으로 확대, 노인복지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기초연금제도로 전환하였으며,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연금이 확대되었다. 이에 복지태도를 보육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별로 복지대상선정에 대한 태도와 복지책임(제공)주체 선호도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들은 패널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복지태도를 유형화하였다. 하지만 복지국가 및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한 2012년 이전 자료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최근 국민의 복지태도 변화를 반영하기에는 한계를 지닌다. 경제위기, 실업, 정치적 선호 등 상황적 요인은 복지태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전국 만 19세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한국사회의 갈등과 협력에 대한 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 그리고 대선 이후 국민들의 복지태도를 규명하고자 한다.

셋째, 연구 방법 측면에서 국민의 복지태도를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유형화하기 위해서는 응답자의 응답패턴을 토대로 유사한 특성을 지닌 복수의 잠재집단을 규명하는 잠재집단분석이 효율적인 분석방법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잠재집단분석을 활용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잠재집단분석을 활용하여 복지태도를 유형화한 김사현·홍경준(2010) 연구에서는 「서울시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민을 한정하여 분석하였으며, 백정미 외(2008)는 복지태도를 미시적 측면이 아닌 국가 간 비교로 거시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복지태도를 유형화하기 위하여 잠재집단분석을 활용하였다.

Ⅲ. 연구설계

1. 가설설정

1) 복지태도 유형에 관한 가설설정

복지태도는 다차원적 관점으로 구성할 수 있다. 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복지국가 유형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이한나·이미라, 2011: 262). 김사현·홍경준(2006)에 따르면 급여는 긴급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17.8%, 급여가 제도적이고 장기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55.1%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한나·이미라(2011) 역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성향 중 보편주의에 대한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이준우 외(2014)는 한국인들이 보편주의보다 선별주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광복70주년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2005년 보편적 복지 선호비율이 47.5%에서 2015년 10년 만에 30.1%로 감소하였다. 이는 국민들의 요구가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현재 한국인의 복지태도 중 복지서비스 제공 대상 선정 기준은 혼재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1-1: 복지대상 선정에 관해서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가 혼재되어 나타날 것이다.

다양한 복지책임 주체 중 누구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제공 형태도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유현중, 2014). 양옥경(2002)은 노인부양에 관한 복지책임주체는 가족과 친척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반면, 장애인복지는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균·류진석(2000) 역시 노인은 가족과 친척의 책임이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은 정부의 책임이 높게 나타났다. 이성균(2002)은 복지 수혜대상집단의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연구에서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모두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모지환·김행열(2009)은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의 복지서비스 운영/전달 주체를 공공부문이 높게 나타난 반면, 아동분야의 경우 민간부문이 높게 나타났다. 보육복지만 초점을 맞춘 권승(2012)의 연구에서는 보육서비스 제공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상당히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할 때 복지책임 주체에 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1-2: 복지서비스 책임주체에 관해서는 시장, 시민단체, 가족보다 국가에 관한 선호도가 높을 것이다.

선호하는 복지체제나 복지관념 등은 복지증세 의도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박경돈, 2015). Esping-Andersen(1990)의 복지체제 유형 중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시민들의 복지혜택 적용 대상 범위가 넓고, 지원의 정도도 관대하며, 높은 수준의 소득

재분배의 특성을 지닌 반면,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민들의 복지혜택 범위가 좁고, 지원 정도는 매우 제한적이며, 소득의 제한적 재분배의 특성을 지닌다. 이에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는 시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대비 복지혜택이 부족하다고 인식하여 증세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반면,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시민들 대부분 보편적 복지제도에 대한 인식을 통해 증세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김윤태·서재욱, 2014).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할 때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찬성 의도는 선호하는 복지체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1-3: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찬성 의도는 선별주의 집단보다 보편주의 집단이 높을 것이다.

2) 복지태도 잠재집단 유형 특성에 관한 가설설정⁴⁾

인구특성요인은 많은 연구에서 복지태도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김상균·정원오, 1995; 류만희·최영, 2009; 김신영, 2010; 김영순·여유진, 2011; 이한나·이미라, 2011; 권승, 2012; 김윤태 외, 2013; Hansenfeld & Rafferty, 1989; Andreß & Heine, 2001; Blekesaune & Quadagno, 2003). 여성은 양육의 부담 등으로 복지제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류진석, 2004; 류만희·최영, 2009). 김윤태 외(2013)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복지증세에 동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할 때 남성과 여성에 따라 복지태도에 대한 유형이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2-1: 성별에 따라 복지태도 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고령층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지위약화로 복지에 대한 의존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 복지에 대한 친화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Blekesaune & Quadagno, 2003; 류진석, 2004; 김신영, 2010, 이한나·이미라, 2011). 한편 Hansenfeld & Rafferty(1989)와 Andreß & Heine(2001)는 젊은 연령층의 경우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혜정도가 고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친화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결과를 규명하였다. 연령에 따라 상반된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으며,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2-2: 연령에 따라 복지태도 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잠재집단분석의 특성에 따라 가설설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복지태도 잠재집단 유형 특성에 관한 가설설정 부분을 복지태도에 대한 유형이 차이가 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류만희·최영(2009)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이한나·이미라(2011)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보편주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균·류진석(2000) 역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국가책임지향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수의 경험적 연구는 교육수준이 복지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이 보고되고 있다(류진석, 2004; 백정미 외, 2008; 김영순·여유진, 2011).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할 때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2-3: 학력에 따라 복지태도 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김영순·여유진(2011)은 저소득층의 경우 고소득층보다 복지 친화적 태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윤태 외(2013)의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일수록 복지정책을 위한 증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규명하였다. 이러한 주장 및 선행연구 결과는 소득에 따라 복지태도에 대한 유형이 차이가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2-4: 소득에 따라 복지태도 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인구특성요인만이 복지태도를 설명하는 요인은 아니다. 주은선·백정미(2007)에 따르면 소득계층별 복지인식에서 하위층이 중산층 및 상위층과 구분되는 뚜렷한 친복지적 성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김상균·정원오(1995)와 김신영(2010) 역시 하위층의 복지태도는 중산층과 상위층에 비해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확대로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할 때 주관적 계층인식에 따라 복지태도에 대한 유형이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2-5: 주관적 계층인식에 따라 복지태도 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Bean & Papadakis(1998)는 정치의식이 복지태도에 중요한 요인으로 주장하였으며, 많은 선행연구에서 정치적 이념성향이 복지태도의 선행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김상균·정원오, 1995; 주은선·백정미, 2007; 이중섭, 2009; 김신영, 2010; 김윤태 외, 2013; 박경돈, 2015). 김윤태 외(2013)는 진보성향일수록 복지 증세에 찬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상균·정원오(1995)와 주은선·백정미(2007) 역시 개인의 정치적 이념성향이 진보성향일수록 복지에 대한 친복지적 태도를 형성함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할 때 이념성향과 복지태도 유

형 차이에 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2-6: 이념성향에 따라 복지태도 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한국인의 복지태도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이 주관한 공존·협력 연구단의 ‘한국사회의 갈등과 협력에 대한 인식조사’ 자료이다. 본 자료는 2015년 4월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을 통해 배포하였다. 자료는 2015년 5월 20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1개월에 걸쳐 수집하였으며, 전국 만 19세이상 성인남녀 1,008명을 최종 실증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측정도구

국민의 복지태도 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보육복지, 노인복지, 그리고 장애인복지에 따른 복지태도를 3가지로 구성하였다. 복지태도는 복지대상 선정에 대한 태도, 복지책임(제공)주체에 대한 인식,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이에 관한 측정도구는 <표 2>와 같다.

<표 2> 측정도구

구 분		내 용	
인지적 태도	복지대상선정에 대한 태도	보육복지	①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제공 ②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정의적 태도	복지책임주체 선호도	보육복지	① 국가 ② 시장 ③ 시민사회 ④ 가족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행동적 태도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의도	소득세	① 증세 반대 ② 보통 ③ 증세 찬성

첫째, 인지적 태도는 복지대상 선정에 대한 태도로 정의하고, “귀하는 보육(노인, 장애인)복지 수혜대상 범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용하였다. 응답범주는 ①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의 2개 범주로 구성하였다. 둘째, 정의적 태도는 복지책임주체 선호도로 정의하

였으며, “귀하는 보육(노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누가 담당해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용하였다. 응답범주는 ① 국가, ② 시장, ③ 시민사회, ④ 가족 등 4개 범주로 구성하였다. 셋째, 행동적 태도는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의도로 정의하였으며, “귀하는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세를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용하였다. 응답범주는 5점 리커트 척도(① 매우 반대 ↔ ⑤ 매우 찬성)로 구성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3개 범주(① 증세 반대, ② 보통, ③ 증세 찬성)로 축소하여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의 범주를 축소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잠재집단분석의 경우 투입되는 변수의 범주 수가 많으면 도출되는 집단의 수가 증가하며, 지나치게 많은 집단의 수의 경우 설명의 간결성(parsimony)을 해칠 수 있다(김사현·홍경준, 2010: 10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의도 문항을 5개 측정범주에서 3개의 측정범주로 축소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분석방법

국민의 복지태도 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잠재집단분석은 변수 중심의 접근방식(variable-centered methods)이 아닌 개인들 간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응답자 중심(person-centered methods)의 유형화를 의미한다(강은나·이민홍, 2014: 141). 즉, 관찰된 변수에 대한 개인들의 응답 패턴을 토대로 유사한 특성을 지닌 복수의 잠재집단을 규명하는 분석방법이다.

잠재집단분석은 자료가 연속형이 아닌 범주형일 때 사용하는 분석방법(이재열, 2005: 273)으로 군집분석과 유사하지만 분산의 동질성, 자료의 정규성, 선형성과 같은 통계적 가정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김사현·홍경준, 2010: 105; 조지용·박태영, 2013: 607). 잠재집단분석은 ML(maximum likelihood) 추정방식의 모형을 기반으로 다양한 적합도 지수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집단 분류를 가능하게 하는 등 다양한 이점을 지니고 있다(조지용·박태영, 2013: 607).

잠재집단을 결정하는 방법은 집단 1개에서 출발하여 집단의 개수를 한 개씩 증가시켜 최적의 잠재집단을 찾는 탐색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단계적이고 반복적인 과정 속에서 최종 잠재집단 개수는 적합도 지수와 Entropy 지수 등을 근거로 결정하게 된다(강은나·이민홍, 2005; 이재열, 2005; 조지용·박태영, 2013; 정은희·최유석, 2014). 적합도 지수는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a),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그리고 SSABIC(sample-size adjusted BIC) 등이 있다. AIC, BIC, SSABIC 값이 적을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좋다고 할 수 있다. Entropy는 0에서 1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집단 간 분류가 정확한 것을 의미한다

(Jedidi et al., 1993). 또한 각 집단을 구성하는 표본 비율은 전체 표본 대비 최소 1% 이상은 되어야 의미 있는 분류라고 할 수 있다(Hill et al., 2000).

수집된 설문자료의 분석을 위해 STATA의 LCA Stata Plugin(1.2 버전)을 활용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및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복지태도 유형은 잠재집단분석, 복지태도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χ^2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표본의 특성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⁵⁾. 첫째,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는 60대 이상이 가장 많고, 40대, 50대, 30대, 19세~29세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최종학력 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고, 고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이하, 대학원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응답자의 거주 지역별 분포에서는 인천/경기가 가장 많으며, 서울, 부산/울산/경남, 대전/충청과 대구/경북, 광주/전라, 강원/제주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응답자의 가구소득별 분포에서는 301만원이상~400만원이하가 가장 많으며, 501만원이상, 201만원이상~300만원이하, 401만원이상~500만원이하, 101만원이상~200만원이하, 100만원이하가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응답자의 직업별 분포에서는 자영업이 가장 많으며, 사무/관리/전문직, 주부, 판매/서비스직, 학생, 생산/기능/노무, 무직, 기타, 농/임/어업 순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응답자의 계층인식별 분포에서는 하위층 가장 많으며, 중산층, 상위층 순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응답자의 이념성향별 분포에서는 중도성향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보수성향, 진보성향 순으로 나타났다.

5) 결측치는 유사한 조건을 가진 다른 레코드를 참고하여 결측치를 추정하는 방법인 단순대치법(Imputation)을 사용하여 대치하였다.

〈표 3〉 표본의 특성

구 분	내 용	빈도(명)	비율(%)	구 분	내 용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499	49.50	이념성향	진보	255	25.30		
	여자	509	50.50		중도	449	44.54		
	계	1,008	100.0		보수	304	30.16		
	계	1,008	100.0		계	1,008	100.0		
연령	19-29세	178	17.66	가구소득	100만원이하	54	5.36		
	30-39세	190	18.85		101-200만원	166	16.47		
	40-49세	215	21.33		201-300만원	186	18.45		
	50-59세	200	19.84		301-400만원	226	22.42		
	60세 이상	225	22.32		401-500만원	173	17.16		
	계	1,008	100.0		501만원이상	203	20.14		
		계	1,008		100.0		계	1,008	100.0
학력	중졸이하	151	14.98	계층인식	상위층	40	3.97		
	고졸	404	40.08		중산층	323	32.04		
	대졸	437	43.35		하위층	645	63.99		
	대학원이상	16	1.59		계	1,008	100.0		
	계	1,008	100.0						
거주 지역	서울	208	20.63	직업	농/임/어업	18	1.79		
	인천/경기	298	29.56		자영업	276	27.38		
	대전/충청	102	10.12		판매/서비스	146	14.48		
	광주/전라	101	10.02		생산/기능/노무	61	6.05		
	대구/경북	102	10.12		사무/관리/전문	183	18.15		
	부산/울산/경남	156	15.48		주부	170	16.87		
	강원/제주	41	4.07		학생	68	6.75		
	계	1,008	100.0		무직	55	5.46		
					기타	31	3.08		
		계	1,008		100.0		계	1,008	100.0

2. 잠재집단분석

복지태도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잠재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log-Likelihood, AIC, BIC, SSABIC, Entropy 등 잠재집단 모형 적합도 지수를 통해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였다. 잠재집단이 2개인 모형에서 시작하여 잠재집단 수를 단계적으로 하나씩 늘려가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표 4〉와 같다.

〈표 4〉 잠재집단분석 결과

잠재 집단	log-Likelihood	df	AIC	BIC	SSABIC	Entropy
2	-4733.812	1506	1597.632	1740.188	1648.082	0.896
3	-4429.065	1491	1018.138	1234.429	1094.682	0.844
4	-4416.905	1476	1023.818	1313.846	1126.458	0.719

2개 집단모형에서 3개 집단모형까지 AIC, BIC, 그리고 SSABIC 값이 감소하다가 4개 집단 모형에서는 적합도 지수가 증가하였다. Entropy 지수의 경우 2개 집단 모형이 0.89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3개 집단 모형이 0.84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IC, BIC, SSABIC, Entropy 등 적합도 지수와 집단분류의 정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3개 집단 모형이 복지태도 유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잠재집단의 조건부 확률을 통해 복지태도의 집단별 특성을 살펴본 후 각 유형의 명칭을 명명하였다⁶⁾. 전체 응답자 대비 각각의 집단 응답자 비율은 잠재집단2가 5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잠재집단3(30%), 잠재집단1(16%) 순으로 나타났다. 잠재집단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잠재집단1은 복지대상 선정에 대한 태도는 보육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두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 제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보육복지와 노인복지의 경우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 제공의 비율이 70%이상인 반면, 장애인복지의 경우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 제공의 비율이 57%로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제공의 비율보다 14%p 높게 나타났다. 복지 책임주체로는 보육복지의 경우 가족의 선호도가 3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시장의 선호도(28%)와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복지에 대한 책임주체로 가족 선호 결과는 기존 연구인 양옥경(2002)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한국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 중 하나인 가족이 가족구성원을 양육하고, 부양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와 책임으로 여기는 가족주의적 사고가 복지태도에 내포되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반면, 노인복지의 시민사회의 선호도가 3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시장의 선호도 또한 28%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복지도 시민사회의 선호도가 3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시장의 선호도가 27%로 높게 나타났다.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의도는 증세찬성이 3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보통이 31%, 증세반대가 30%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잠재집단1을 선별적 복합 중심형으로 명명하였다.

6) 잠재집단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집단의 유형 명명시 태도 구성요소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행동적 태도인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의도의 경우 각 집단마다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 않아 인지적, 정서적 태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집단별 유형을 명명하였다.

잠재집단2는 복지대상 선정에 대한 태도는 보육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두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 제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보육복지와 노인복지의 경우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 제공의 비율이 90%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장애인복지의 경우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 제공의 비율은 77%로 나타났다. 복지책임주체는 보육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두 국가의 선호도가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국민들이 보육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를 제공하는데 있어 국가의 책임을 상당히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최균·류진석, 2000).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의도는 증세반대가 3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증세찬성과 3%p 차이나는 수준이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잠재집단2를 선별적 국가 중심형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단3은 복지대상 선정에 대한 태도는 보육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두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제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보육복지와 노인복지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제공의 비율이 80%인 반면, 장애인복지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제공의 비율이 92%로 보육과 노인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복지책임주체는 보육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두 국가의 선호도가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의도는 보통이 34%, 증세찬성과 증세반대가 각각 33%로 나타나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집단3의 경우 보육, 노인, 장애인복지에 대한 대상선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제공하길 원하지만 그에 따르는 비용부담은 꺼려하는 늪프(Not Out Of My Pocket: NOOMP)현상으로 복지태도에 대한 이중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최균·류진석, 2000; 권승, 2012; 현대경제연구원, 2012; 김사현, 2015). 이에 잠재집단3을 보편적 국가 중심형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단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선별적 복합 중심형과 선별적 국가 중심형, 보편적 국가 중심형으로 나타나 복지대상 선정에 관해서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가 혼재되어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1-1>은 채택되었다. 복지책임 주체의 선호도는 선별적 복합 중심형을 제외한 나머지 선별적 국가 중심형과 보편적 국가 중심형으로 나타나 복지서비스 책임주체에 관해서는 시장, 시민단체, 가족보다 국가에 관한 선호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1-2>는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의도의 경우 선별적 복합 중심형은 증세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선별적 국가 중심형은 증세반대 비율이, 보편적 국가 중심형은 보통이 높게 나타나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찬성의도는 선별주의 집단보다 보편주의 집단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1-3>은 기각되었다.

〈표 5〉 잠재집단별 조건부 응답확률

구 분			잠재집단(Latent class)			
			선별적 복합 중심형	선별적 국가 중심형	보편적 국가 중심형	
복지대상 선정	보육복지	보편	22%	7%	81%	
		선별	78%	93%	19%	
	노인복지	보편	24%	7%	84%	
		선별	76%	93%	16%	
	장애인 복지	보편	43%	23%	92%	
		선별	57%	77%	8%	
복지책임주체	보육복지	국가	18%	93%	95%	
		시장	28%	4%	4%	
		시민사회	24%	1%	1%	
		가족	30%	2%	0%	
	노인복지	국가	13%	96%	92%	
		시장	28%	2%	5%	
		시민사회	36%	2%	2%	
		가족	22%	0%	1%	
	장애인 복지	국가	23%	96%	93%	
		시장	27%	2%	5%	
		시민사회	33%	2%	2%	
		가족	18%	0%	0%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의도	소득세	증세찬성	39%	34%	33%
			보통	31%	29%	34%
			증세반대	30%	37%	33%
	잠재 집단 비율			16%	54%	30%

3. 복지태도 유형별 특성분석

복지태도 유형별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복지태도 유형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 계층 인식 및 이념성향 특성을 분석하였다(〈표 6〉, 〈표 7〉 참조).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선별적 복합 중심형과 선별적 국가 중심형은 여성이 많은 반면, 보편적 국가 중심형은 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에게 비해 여성이 복지대상 선정에 대한 태도는 선별적인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친복지적 성향을 보인다는 Andreß & Heien(2001)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성별에 따른 복지태도 유형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복지태도

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2-1>는 기각되었다.

연령의 경우 선별적 복합 중심형은 19-29세가 23.72%로 높게 나타났으며, 선별적 국가 중심형은 60세 이상이 26.92%로 높게 나타났다. 보편적 국가 중심형은 40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혜정도가 고령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친화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Hansenfeld & Rafferty(1989), Andreßs & Heine(2001), 주은선·백정미(2007) 등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령에 따라 복지태도 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2-2>는 채택되었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선별적 복합 중심형과 보편적 국가 중심형은 대학교 졸업이, 선별적 국가 중심형은 고등학교 졸업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력에 따라 복지태도 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2-3>은 채택되었다.

소득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선별적 복합 중심형과 보편적 국가 중심형은 501만원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선별적 국가 중심형은 301만원-400만원이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p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에 따라 복지태도 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2-4>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소득이 낮을수록 복지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게 되어 복지친화적 태도를 형성한다는 기존 연구와 상반된 결과이다(김영순·여유진, 2011; 김윤태 외, 2013).

〈표 6〉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복지태도 유형

구 분		선별적 복합 중심형	선별적 국가 중심형	보편적 국가 중심형	전 체	χ^2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성별	남자	75	257	167	499	4.570 (0.102)
		48.08%	47.07%	54.58%	49.5%	
	여자	81	289	139	509	
		51.92%	52.93%	45.42%	50.5%	
	합계	156	546	306	1,008	
		100%	100%	100%	100%	
연령	19-29세	37	79	62	178	26.813** (0.001)
		23.72%	14.47%	20.26%	17.66%	
	30-39세	27	97	66	190	
		17.31%	17.77%	21.57%	18.85%	
	40-49세	34	104	77	215	
		21.79%	19.05%	25.16%	21.33%	

	50-59세	30	119	51	200	
		19.23%	21.79%	16.67%	19.84%	
	60세 이상	28	147	50	225	
		17.95%	26.92%	16.34%	22.32%	
	합계	156	546	306	1,008	
		100%	100%	100%	100%	
학력	중졸이하	20	101	30	151	17.009** (0.009)
		12.82%	18.5%	9.8%	14.98%	
	고졸	60	224	120	404	
		38.46%	41.03%	39.22%	40.08%	
	대졸	72	214	151	437	
		46.15%	39.19%	49.35%	43.35%	
	대학원이상	4	7	5	16	
		2.56%	1.28%	1.63%	1.59%	
	합계	156	546	306	1,008	
		100%	100%	100%	100%	
소득	100만원이하	9	36	9	54	18.616* (0.045)
		5.77%	6.59%	2.94%	5.36%	
	101-200만원	27	95	44	166	
		17.31%	17.4%	14.38%	16.47%	
	201-300만원	28	98	60	186	
		17.95%	17.95%	19.61%	18.45%	
	301-400만원	28	131	67	226	
		17.95%	23.99%	21.9%	22.42%	
	401-500만원	24	98	51	173	
		15.38%	17.95%	16.67%	17.16%	
501만원이상	40	88	75	203		
	25.64%	16.12%	24.51%	20.14%		
합계	156	546	306	1,008		
	100%	100%	100%	100%		

*p<0.05, **p<0.01

주관적 계층인식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유형에서 하위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관적 계층인식에 따라 복지태도 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2-5>는 기각되었다.

이념성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유형에서 중도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도성향을 제외한 진보성향과 보수성향을 비교해 볼 때, 선별적 복합 중심형과 선별적 국가 중심형은 보수성향, 보편적 국가 중심형은 진보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p<0.01 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진보성향인 국민일 수록 친복지적 태도를 형성한다는 주은선·백정미(2007), 김윤태 외(2013) 등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이념성향에 따라 복지태도 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2-6>는 채택되었다.

〈표 7〉 응답자의 주관적 계층인식 및 이념성향 특성과 복지태도 유형

구분		선별적 복합 중심형	선별적 국가 중심형	보편적 국가 중심형	전체	χ^2
		빈도(%)	빈도(%)	빈도(%)	빈도(%)	
계층 인식	상위층	11	17	12	40	8.112 (0.088)
		7.05%	3.11%	3.92%	3.97%	
	중산층	47	166	110	323	
		30.13%	30.4%	35.95%	32.04%	
	하위층	98	363	184	645	
		62.82%	66.48%	60.13%	63.99%	
합계	156	546	306	1,008		
	100%	100%	100%	100%		
이념 성향	진보	38	118	99	255	15.383** (0.004)
		24.36%	21.61%	32.35%	25.3%	
	중도	74	243	132	449	
		47.44%	44.51%	43.14%	44.54%	
	보수	44	185	75	304	
		28.21%	33.88%	24.51%	30.16%	
합계	156	546	306	1,008		
	100%	100%	100%	100%		

*p<0.05, **p<0.01

〈표 8〉 가설검증 결과

구분	가설내용	검증 결과
가설1-1	복지대상 선정에 관해서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가 혼재되어 나타날 것이다.	채택
가설1-2	복지서비스 책임주체에 관해서는 시장, 시민단체, 가족보다 국가에 관한 선호도가 높을 것이다.	채택
가설1-3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찬성의도는 선별주의 집단보다 보편주의 집단이 높을 것이다.	기각
가설2-1	성별에 따라 복지태도 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2-2	연령에 따라 복지태도 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2-3	학력에 따라 복지태도 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2-4	소득에 따라 복지태도 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2-5	주관적 계층인식에 따라 복지태도 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2-6	이념성향에 따라 복지태도 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한국인의 복지태도 유형을 규명하고, 각 유형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복지태도를 인지적 요소, 정의적 요소, 행동적 요소로 구성하여 잠재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대한 잠재집단분석결과 선별적 국가 중심형(54%), 보편적 국가 중심형(30%), 선별적 복합 중심형(16%) 등 3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은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복지를 제공하길 원하며, 복지책임주체는 국가를 선호하고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유형인 선별적 국가 중심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복지대상 선정에 대한 태도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제공하며, 복지책임주체로 국가를 선호하고,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의도는 보통수준인 보편적 국가 중심형으로 나타났다. 선별적 국가 중심형과 보편적 국가 중심형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복지책임 주체측면에서 국가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지만 복지대상 선정과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부분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별적 복합 중심형은 복지대상은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며, 복지책임주체의 경우 보육복지는 상대적으로 가족을 선호하고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는 시민사회를 선호하며,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별적 복합 중심형에서 보육복지의 책임 주체에 대한 선호도가 가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흥미로운 점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치관 중 하나인 가족주의적 사고가 내포되어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둘째, 한국인의 복지태도 유형 특성 분석결과, 성별의 경우 선별적 복합 중심형과 선별적 국가 중심형은 여성이 많은 반면, 보편적 국가 중심형은 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복지대상 선정에 대한 태도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공되어야 한다는 선별적인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의미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어 <가설2-1>은 기각되었다. 연령의 경우 선별적 복합 중심형은 19-29세가 23.72%로 높게 나타났으며, 선별적 국가 중심형은 60세 이상이 26.92%로 높게 나타났다. 보편적 국가 중심형은 40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2-2>는 채택되었다. 학력은 선별적 복합 중심형과 보편적 국가 중심형은 대학교 졸업이, 선별적 국가 중심형은 고등학교 졸업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력에 따라 복지태도 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2-3>은 채택되었다. 소득의 경우 선별적 복합 중심형과 보편적 국가 중심형은 501만원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선별적 국가 중심형은 301만원-400만원이하가 높게 나타

났다. 이는 $p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에 따라 복지태도 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2-4>는 채택되었다. 주관적 계층인식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유형에서 하위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주관적 계층인식에 따라 복지태도 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2-5>는 기각되었다. 이념성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유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중도성향을 제외한 진보성향과 보수성향을 비교해 볼 때, 선별적 복합 중심형과 선별적 국가 중심형은 보수성향, 보편적 국가 중심형은 진보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념성향에 따라 복지태도 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2-6>은 채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복지태도 구성요소별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서비스 수혜대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선별적 국가 중심형(54%)과 선별적 복합 중심형(16%)에서 복지 수혜대상을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선별주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광복70주년 국민의식조사」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광복70주년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편적 복지 찬성비율이 47.5%(2005년)에서 30.1%(2015년)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 전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복지서비스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보육복지는 68.4%, 노인복지는 66.9% 등 선별주의 비중이 높은 반면 장애인복지는 53.4%로 보육복지와 노인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별주의 선호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보육복지 및 노인복지와 달리 장애인 복지의 경우 수혜대상이 모든 대상이 아닌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추론할 수 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의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복지를 제공하길 원하는 것으로 복지서비스 수혜대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시 복지서비스 분야에 따른 특수성도 함께 논의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복지서비스 책임주체에 대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선별적 국가 중심형(54%)과 보편적 국가 중심형(30%)에서 복지서비스 주체로 국가를 선호하는 반면, 선별적 복합 중심형에서는 국가가 아닌 보육복지는 가족, 노인과 장애인복지는 시민사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복지서비스 책임주체로서 국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국가가 아닌 가족이나 시민사회, 시장에 대한 선호도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사회문제 중 특히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시장, 시민사회, 가족 등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최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인 사회적경제 조직은 민관 협력 거버넌스에 기반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이

다. 복지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보육의 공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경제 국공립어린이집을 현재 서울시 서대문구와 경기도 광명시에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1,0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그 중 10%인 1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적경제에 위탁하며, 노인요양을 위한 데이케어센터 100개 중 10%인 10개도 사회적경제가 운영할 계획이다(뉴시스, 2015). 이러한 맥락에서 복지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국가를 중심으로 시장, 시민사회, 가족 등을 포함한 협력적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은 국민의 수요를 반영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다.

셋째, 복지국가의 기반이 되는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전체표본 중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세 증세에 34.6%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4.4%가 증세에 찬성, 그리고 30.9%가 증세에 보통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의 복지태도 유형에 따른 증세의도 패턴은 증세찬성, 증세반대, 보통이 혼재되어 나타나며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즉, 보편주의를 추구하는 집단이 선별주의를 추구하는 집단보다 증세에 찬성할 가능성이 확연하게 높지 않았으며, 이는 한국인들의 증세의도에 대한 태도는 복지서비스 선정 대상 외에 기타요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다. 한편 국내의 증세반대 및 반대이유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세금을 방만하게 사용이 69%(중복응답), 세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음이 5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 중 65.4%는 세금이 투명하게 관리된다면 세금을 더 낼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초이스경제, 2015).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볼 때 복지재정에 대한 투명한 예산집행과 객관적인 효과성 평가를 실행(이중섭, 2009: 94)하는 것이 복지재정의 낭비를 방지하여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임을 짐작할 수 있겠다. 향후 복지재정확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증세에 대한 '반대' 및 '보통' 의사를 '찬성'으로 태도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복지서비스에 대한 단기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중심으로 일관성있는 복지정책 수립과 실행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물론 정부와 국가에 관한 신뢰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은나·이민홍(2014). 시설거주노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유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노인요양시설 외부 관계자원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4(2): 133-160.
- 강정희·염동문(2014). 소득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치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논총」, 30(2): 319-351.
- 권승(2012). 보육서비스에 대한 복지태도 형성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8(4): 205-230.
- 김사현(2015). 한국인의 복지태도 불일치에 대한 탐색적 연구: 복지지출과 증세에 대한 태도불일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1(1): 27-57.
- 김사현·홍경준(2010). 잠재집단분석방법을 통한 서울시민의 복지태도 연구. 「사회복지정책」, 37(2): 95-121.
- 김상균·정원오(1995). 90년대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25: 1-33.
- 김신영(2010). 한국인의 복지의식 결정요인 연구: 국가의 정책책임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11(1): 87-105.
- 김영순·여유진(2011). 한국인의 복지태도: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211-240.
- 김유경(2012). 중산층의 주관적 귀속의식 및 복지인식. 「보건·복지 Issue & Focus」, 1-8.
- 김유경·정현숙·임성은·김정숙(2011). 『중산층가족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윤태·서재욱(2014). 한국의 복지태도와 복지제도. 「동향과 전망」, 331-378.
- 김윤태·유승호·이훈희(2013). 한국의 복지태도의 정치적 역동성: 탈계급성과 정치적 기회의 재평가. 「한국학연구」, 45: 183-212.
- 김희자(2013). 계급·계층이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교육변인의 조절효과 연구. 「한국사회정책」, 20(2): 35-68.
- 뉴스시스(2015). 서울시, 신설 국공립어린이집 100곳 지역 여성들에 맡긴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05_0013515576&cID=10201&pID=10200
- 류만희·최영(2009).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도 연구: 복지의식, 계층, 자기이해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1): 191-210.
- 류진석(2004). 복지태도의 미시적 결정구조와 특성. 「한국사회복지학」, 56(4): 79-101.
- 모지환·김행열(2009). 한국인의 복지인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조선대 동북아연구소」, 24(1): 179-199.
- 박경돈(2015). 복지증세에 대한 인식과 영향요인. 「한국행정연구」, 24(3): 91-119.
- 백정미·주은선·김은지(2008). 복지인식 구조의 국가 간 비교: 사민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복지국가와 한국. 「사회복지연구」, 37: 319-344.
- 보건복지부(2012). 2012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보건복지부(2015). 2015년 국민행복분야 업무 계획.
- 보건복지부(2015). 2015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양옥경(2002).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한국인의 복지의식 연구: 서울지역 기혼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1: 229-256.
- 유현종(2014).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비교복지국가론적 분석: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5가지 복지레짐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3(1): 1-38.
- 이광훈·김권식(2012). 복지인식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준(quasi) 실험설계를 활용한 복지 지출가치성(VFM) 측정방법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43(1): 95-113.
- 이성균(2002). 한국사회 복지의식의 특성과 결정요인: 국가의 복지책임지지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6(2): 205-228.

- 이재열(2005). 『사회과학의 고급계량분석: 원리와 실제』.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준우·정지용·신현석·이현아. (2014). 경기도민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14(2), 63-81.
- 이중섭(2009).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6(4): 73-99.
- 이하나·이미라(2010). 한국인의 복지태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형평성 지각의 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0(2): 254-286.
- 이훈희·김윤태·이원지(2011). 한국의 복지태도와 건강보험 인식의 결정요인. 「사회보장연구」, 27(2): 1-25.
- 정은희·최유석(2014). 아동거주가구의 빈곤에 관한 다차원적 접근: 잠재집단분석을 이용한 유형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6): 129-139.
- 조성대·윤병섭·김재득·박은미·이홍재(2003). 『정보사회의 인간관계』. 서울: 박영사.
- 조지용·박태영(2013). 잠재집단분석을 이용한 퇴직자의 사회적 관계유형 변화에 관한 중단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8(4): 599-623.
- 주은선·백정미(2007). 한국인의 복지의식 지형: 계층, 복지수요, 공공복지 수급경험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4: 203-225.
- 초이스경제(2015). 납세자, 증세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다. <http://www.choic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66>
- 최균·류진석(2000). 복지의식의 경향과 특징: 이중성. 「사회복지연구」, 16: 223-254.
- 한덕용·성한기·강혜자·이경성·최훈석·박근석·김금미·장은영(2004). 『사회심리학』. 서울: 학지사.
- 한동우(2015). 복지정책 체감도와 사회복지행정. 「복지로 복지 이슈 & 칼럼」
- 허만형(2009). 사회복지 이데올로기 정향분석: 서울시민의 복지의식 탐색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2): 99-118.
- Allport, G. W. (1935). *Attitudes*. In C. Murchison (Ed.), *A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Worcester, MA: Clark University Press.
- Andreß, H. J., & Heien, T. (2001). Four worlds of welfare state attitudes? A comparison of Germany, Norway, and the United Stat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7(4): 337-356.
- Bean, C. & E. Papadakis. (1998). A Comparison of Mass Attitudes: Towards the Welfare State in Different Institutional Regime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0: 211-236.
- Berkman, H. W. & L. L. Neider. (1987). *The Human Relations of Organizations*. Kent Publishing Company.
- Blekesaune, M. & J. Quadagno. (2003). Public Attitudes toward Welfare State Policies: A Comparative Analysis of 24 Nation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9(5): 415-427.
- Breckler, S. J. (1984). Empirical Validation of Affect, Behavior, and Cognition as Distinct Components of Attitud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6): 1191-1205
-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asenfeld, Y., & J. A. Rafferty. (1989). The Determinants of Public Attitudes toward the Welfare State. *Social Forces*, 67(4): 1027-1048.
- Hill, K. G., White, H. R., Chung, I., Hawkins, J. D. & R. F. Catalano. (2000). Early adult Outcomes of

- Adolescent binge Drinking: Person-and variable-centered Analyses of binge Drinking Trajectories. *Alcoholism: Clinical & Experimental Research*, 24(6): 892-901.
- Jedidi, K., Ramaswamy, V., & W. S. Desarbo. (1993). A Maximum Likelihood Method for Latent Class Regression involving a censored Dependent Variable. *Psychometrika*, 58(3): 375-394.
- Katz, D. & E. Stotland. (1959). A Preliminary Statement to a Theory of Attitude Structure and Change. *Psychology: A Study of a Science*, 3: 423-475.
- Page, B. & R. Shapiro. (1983). Effects of Public Opinion on Public Poli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7(1): 175-190.
- Robbins, S. P., & T. A. Judge. (2011). *Organizational Behavior*(4th ed.). Pearson.
- Rosenberg, M. J. & C. I. Hovland. (1960). Cognitive, Affective, and Behavioral Components of Attitudes. *Attitude Organization and Change: An Analysis of Consistency among Attitude Components*, 3, 1-14.
- Svallfors, S. (2004). Class, Attitudes and the Welfare State: Sweden in Comparative Perspective.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38(2): 119-138.
- Taylor-Gooby, P. (1985). Attitudes to Welfare. *Journal of Social Policy*, 14(1): 73-81.

A Study on Koreans' Welfare Attitude Type Using the Latent Class Analysis

Park, Mi Kyung & Cho, Rosa Minhy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Koreans' welfare attitude types and further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welfare attitude. Latent Class Analysis is used on a recently collected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Korean adult residents in order to categorize attitudes towards welfare provision based on cognitive, affective, and behavioral components. The results reveal three distinct welfare attitude types: the selective complex centered cluster (16%), the selective government centered cluster (54%), and the universal government centered cluster (30%).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s.

[Key Words: Welfare attitude, Type of welfare attitude, Latent Class Analysis]